

대중문화산업의 평가와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 일시 | 2019년 11월 4일 (월) 오후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인숙, (재)여의도연구원

차 례

- | 발제문 | **대중문화산업-자율과 이념의 간섭 사이에서**
조희문 영화평론가
- | 토론문1 | **대중문화산업 평가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서성교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초빙교수
- | 토론문2 | **문화 강국인 동시에 문화 후진국인 대한민국**
남정옥 대한민국 문화 예술인 공동대표
- | 토론문3 | **문화 정책에 대한 몇가지 제언**
이인철 변호사
- | 토론문4 | **대중문화산업 평가와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토론문**
남찬우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 | 토론문5 | **대중문화산업 평가와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토론문**
이기현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 문화산업 - 자울과 이념의 간섭 사이에서

조희문 영화평론가

대중 문화산업 - 자율과 이념의 간섭 사이에서

조희문/ 영화평론가.

전 상명대학교, 인하대학교 교수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1. 대중문화 산업 개황

대중문화가 무엇인지 경계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 단순히 영화라 하더라도 세부에 들어가면 영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를 수 있고, 산업적 유통 구조에서 영위되는 것인지, 개인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미학적 표현에 몰두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평가나 위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여가나 취미로 즐기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게임, 가요, 춤 등을 가리킨다. 과거에는 대중문화 매체들의 유통경로가 제한적이어서 접촉의 한계가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대중 문화의 소비패턴은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상태다. 길을 걸거나 운동을 할 때도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흔하다.

전철을 타고 있는 승객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연예소식이나 음식 레시피를 접하고, 패션이나 특이한 장소를 살피기도 한다. 미용이나 육아, 음식, 건강, 운동, 스포츠 등 온갖 분야의 정보들이 소통된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새로운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BTS의 활동은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는 최고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하며, 게임, 스포츠 분야에서도 상위 그룹에 든다.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국내를 벗어나 해외 시장을 누비고 있는 현실을 증명하는 단어가 되었다.

오랫동안 한국의 대중 문화는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빈약하고 위축된 상태로 숨죽였다. 영화의 경우, ‘영화’라면 당연히 외국영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통했고, 한국영화는 ‘국산영화’ ‘최루탄영화’ 등으로 불리며 멸시를 받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그 같은 상황은 급변했다. ‘쉬리’가 흥행 선봉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한국영화는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바뀌었다. 1천만 관객을 넘기는 ‘대박’ 영화들이 간단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영화를 벤치 마킹하거나 투자, 배급에 참여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활동도 나타난다.

몇 년 전 작곡가 겸 매니저 박진영은 미국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자신이 발굴한 걸그룹과 함께 프로모션 투어를 시도했다. 국내시장에서는 성장했지만, 드넓은 해외 시장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물안 개구리 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의 반영이었다. 그런 시도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계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대중문화의 성장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박진영의 아날로그 식 노력이 진행되고 있던 무렵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조회 신기록을 세우며 선풍을 일으켰다. 한국가수의 노래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세계와 유통한 첫 번째 경우가 아닐까 한다.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확인과 자신감을 얻는 계기이기도 했다.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한국드라마와 영화, 가요가 일본 시장으로 달려갔고, 중국에서도 한류는 열풍을 일으켰다. 수많은 탤런트, 배우, 가수들이 스타로 주목받았고, 그들이 소비하는 패션, 화장품, 음식 등 여러 가지 관련 상품이 함께 인기상품으로 떠올랐다. ‘대장금’은 일본 뿐 아니라 중동이나 남미 여러 국가들에서도 인기를 모았다. ‘별에서 온 그대’는 김수현이나 전지현을 중국 팬들의 인기를 모았고, 맥주에 치킨을 안주로 곁들인 ‘치맥’은 한국의 대표 메뉴처럼 통했다.

한국 대중문화의 에너지는 4차 산업 시대의 등장과 맞물리면서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야 할 때가 되었다. 영화계의 경우 중국 자본에 예속되는 것은 아닌지, 게임 분야는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차별과 적대로 인해 시장을 제한 당하고 있는 상태여서 업계가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역대 어느 시절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장기를 맞았지만, 국내외 정치적 변수, 동종 업계의 경쟁 심화, 소비자의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오늘의 성공이 미래의 안전까지 보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의 대중문화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권의 성격에 따른 이념적 영향, 여론에 편승하는 정부의 눈치보기 식 정책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문화비전2030’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은 2018년 12월에 새문화정책준비단이 만든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에 수록되어 있다. 문화부 내의 사업단 성격을 띤 새문화정책준비단은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을 단장으로 하여 19명의 TF 위원과 8명의 TF 분과위원, 문화부 측 5명의 담당 등 모두 36명으로 구성되었다. 각 대학교의 해당분야별 교수와 문화관광연구원 소속 일부 연구원들이 참여했지만 사실상 좌파 진영의 문화 정책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문화연대와 민예총이 주도하여, 문화부가 유지하고 있던 대강의 문화 정책 운영 방향에다 좌파적 개념을 섞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정책 보고서의 앞머리에 밝히고 있는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란 가치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자율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문화 활동과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개인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관광 및 문화산업 종사자,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담았다. 다양성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힘을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 인종, 종교만이 아니라 세대, 성, 성차, 장애, 지역을 아우르고, 나아가 예술의 크고 작은 집단들이 서로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의성은 단지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역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육, 노동, 복지, 도시재생, 환경, 통일 분야에서 문화가 사회 발전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가치이자 동력이다. 이러한 문화의 3대 가치를 기반으로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이란 3대 방향을 설정했다. 3대 방향은 각각 3개의 실천 의제들을 포함한다.

‘개인의 자율성 보장’에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확대’, ‘성평등 문화의 실현’이란 의제가,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이란 의제가, 그리고

‘사회의 창의성 확산’에는 ‘문화자원의 융합역량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란 의제가 담겨 있다. 9개의 의제 안에는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많은 실천과제들이 담겨 있다.

『문화비전2030』은 3대 가치, 3대 방향, 9대 의제를 기본 골격으로 47개의 대표과제와 186개의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여 2030년까지 국가 문화비전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문화비전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보고서는 실행조직 구성과 민간과의 협치 방안, 법, 제도 개선 및 자원조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구호와 실행 사이의 간격

‘문화비전 2030’은 대강의 틀에서는 문화정책의 기본 지향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는 이념적 편향과 대립, 갈등의 조장, 편가르기에 따른 피아의 구분과 적대적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향과 실천 사이에 상당한 괴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 정책의 대상에 대해서도 산업적 자생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보다는 이념적 가치를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개념 속에는, 과도한 노동시간, 심화되는 빈부 격차, 이념적 편향 등의 문제로 국민의 문화권 또는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과정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까지 포용하겠다’고 했지만, 집권의 반환점을 넘기고 있는 현재까지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할만 한 가시적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화의 과정이 특정 세력의 성과물인 것처럼 호도하며, 지지세력과 비판 세력에 대한 대응 태도는 현저하게 다르다. 지지세력의 주장은 ‘국민의 소리’ ‘열렬한 호응’으로 구분하지만, 비판적 입장에 대해서는 ‘적폐세력’으로 몰거나 ‘가짜뉴스 생산자’, ‘개혁을 방해 세력’ ‘친일파’ ‘토착왜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규정한다.

‘문화비전 2030’은 ‘문화’의 포괄적 개념을 관념적으로 설정하기는 하지만, 어떤 세력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분은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수호하려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그 반대 입장에서 자유민주적 가치와 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하려는 세력들의 파괴적 활동에 대해서 등가의 가치로 보거나 오히려 반대 세력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는 주체로 설정하려고 한다.

문화예술계가 ‘뒤집어진 운동장’이 되었다는 한탄 섞인 비판이 나오는 것은 좌파 세력이 현장과 단체, 조직, 행정 등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좌파 세력들은 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영화, 방송, 미술, 출판 등 여러 매체들을 보수 정권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각종 농산물 수입 개방, 한미간 FTA체결, 평택 미군기지 이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스크린쿼터 축소, 한국군 해외파병, 4대강 개발 사업,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드배치, 한일간 위안부 문제 협상 등 국내외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저지하거나 비난하려는 시도가 무차별적으로 터져나왔다. 좌파 계열의 예술가를 자처하거나 그들과 연계된 단체들은 드러내듯 연대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문성근, 명계남, 김제동을 비롯하여 권해효, 김여진, 김제동, 김미화 등 각종 시위의 배후를 조직하고 지휘하는 것으로 의심받거나 현장에서 앞에 나서는 인물들에게는 ‘개념연예인’이라고 치켜세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니 청산가리를 먹는게 낫겠다고 한 어느 여배우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야비하게 비난했던 배우나 탤런트, 가수 들 중에서도 그런 타이틀을 붙이기도 한다. 대중문화 분야 일수록, 대중적 영향력이 큰 장르일수록 프로파간다에 동원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문화와 정치의 경계-블랙리스트 논란

박근혜대통령 탄핵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중요한 변수로 동원된 것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였다.

‘블랙리스트’ 문제가 수면 위로 튀어오른 것은 2016년 10월. 국회의 국정감사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문화예술계 인물 중 각급 단위에서 지원하는 각종 대상에서 배제하는 예술가 명단이 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실에서 독자적으로 제기한 문제라기보다는 민예총,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등 좌파 성향의 단체들에서 조직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취합하여 도종환 의원실로 넘겼고, 국정감사라는 제도적 과정을 통해 공론화하는 패턴이다. 국정 감사에서 제기된 블랙리스트 시비는 좌파 성향 언론을 타고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는 과정을 거쳤다. 좌파 세력들이 소문 수준의 이슈를 사회적 관심사로 띄우는 전형적 방식이다

민예총, 문화연대, 작가회의 등 좌파 성향의 단체와 개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책임자 처벌과 예술 검열반대 예술행동'(이하 예술행동)이라는 조직을 급조하여 시위에 나섰다. 이 급조 조직에는 민예총을 비롯한 200여 개의 단체들과 숫자를 알 수 없는 개인들이 참여했다. 지원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경우, 이도 저도 아니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빌미로 가담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여러 유형이 뒤섞인 상태로 구성되었고,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개별 활동으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무차별적으로 가담했다. 전통 예술가라는 이수환은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없더라. (정부에) 무시당한 것이 슬퍼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통예술가라는 것이 어떤 활동을 가리키는 것인지, 어떤 명단에도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슬펐다는 주장은 '예술행동'에 참가한 인물들의 구성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활동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칭' 예술가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예술가인지 아닌지는 문제 되지 않았고,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는지의 여부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무조건 '나는 피해자'였거나 '피해자를 지지'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지만 궁극의 목표는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후 특검이 구성되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시비 논란은 대통령 탄핵의 주요 혐의 중 하나가 되었다. 좌파 세력은 블랙리스트 논란을 대통령 탄핵의 중요 명분의 하나로 삼은 것에 그치지 않고 2017년 7월 31일에는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영화, 연극, 출판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사례를 끌어 모은 뒤 본책 4권과 부록 6권 등 모두 10권으로 구성된 백서를 만들었다. 도종환 문화부 장관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018년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청와대비서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화 예술 관련 업무를 관장하거나 관련 업무를 다루었다고 지목한 정부,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인망식으로 긁어모은 내용을 채웠다. 관련 기관의 직원들을 상대로 탐문하거나 블랙리스트와 연관되어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 받은 사례를 들고 확인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미리 설정한 목적에 맞추어 대부분의 사례들을 수집해 놓은 경우여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전혀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정부 기관 단위에서 진행된 좌파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관리 업무와 관련한 내용 7건을 비롯하여 ▲연극 공연과 관련한 44건 ▲문학·출판 분야 21건 ▲영

화 분야 13건 ▲미술·기타 분야 29건 등 모두 114건의 사례를 모아 놓았다.

정부 기관 단위의 관련 활동은 부록 1편에 수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국가정보원의 관여 내용, ▲이명박 정부의 특정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사건 ▲한국예술종합학교 블랙리스트 적용사건 ▲박근혜 정부의 좌파 문화예술계 배제 문화융성정책 입안 및 실행방안에 관한 직권조사 ▲문체부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등의 구성 및 운영사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재외 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사건 등 7건을 나열하고 있다.

부록 5권에 수록된 영화 부문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 논란과 관련한 ▲부산국제영화제외압사건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사건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사건 ▲영상물등급위원회 문제영화 검열·배제사건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 ▲맹수진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사전제작지원 심사위원 배제 등 사건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배제 사건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제도를 통한 문제영화 상영 방해 사건 ▲유인택의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지원 배제 사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 사건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사건 ▲‘썬시네마달’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영화사 ‘청어람’의 블랙리스트 관리 및 외압 등 사건 ▲2010~2011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 사업지원 축소 의혹 사건 등 모두 14건을 적시하고 있다.

영화 부문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논란이라고 적시한 사례는 대부분 좌파 영화인들의 반정부적, 위법적 활동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모두 부당한 조치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그치는 수준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산영화제 또는 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 논란은 좌파 세력의 정치공세를 문화적 갈등으로 위장한 경우다. 세월호 침몰은 단지 사고일 뿐이었지만 정치적 음모로 조작한 사건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며 정권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는다. 좌파 세력들은 순수한 영화를 왜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느냐며 조직적인 반발에 나섰다. 처음부터 영화는 영화적 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세월호 사건을 좌파적 진영 논리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는 선동, 선전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부산시장은 영화제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화가 상영되는 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내부적인 검토가 가능했다. 제작 과정에서부터 제기된 이 영화와 관련된 논란은 부산시나 영화제 측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내부적인 조정도 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부산시와 영화제 집행부 사이의 누적된 갈등이 이를 계기로 돌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영화제의 개최 비용 중 60% 정도는 부산시가 지원한다. 부산시의 지원이 없었다면 영화제는 출발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에 따라 영화제의 조직위원장은 부산시장이, 집행위원장은 오랫동안 김동호(전 문화부 차관)가 맡고 있었지만, 이른바 대외적 간판 역할을 하는 바지사장

역할이었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이용관(부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현재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장)과 문성근 등으로 연결되는 좌파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일방적으로 부산시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횡수를 거듭하면서 부산영화제의 위상이 안정 단계로 전환되는 듯 하자, 영화제 운영을 장악한 세력 측에서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부산시 측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산시가 담당하고 있는데도, 시의 개입을 배제하며 독자적 운영을 하려는 영화제 측에 대해서 불만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 ‘다이빙벨’ 상영 여부가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 부산시와 영화제 운영 세력들 간 정면충돌 형태로 돌출된 것은 그동안 누적된 내부 알력이 표면화 된 것이다. 부산시의 정당한 운영관리를 통제와 압박이라고 여긴 영화제 운영진과 좌파 세력은 이를 부당한 간섭과 개입이라고 반발하는 형태로 여론화 작업을 시도했고, 결국 전술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다이빙벨’ 상영은 부산영화제 집행부의 기만적 도발이었지만,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이용관은 이를 부당한 외압이라고 진술했고(위원회 보고서), 위원회 역시 이를 블랙리스트 외압사건으로 단정하고 있다. 좌파 세력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의 ‘화이트 리스트’-‘판도라’와 ‘부산국제영화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15일, 부산국제영화제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 청와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며 면밀하게 준비했을 것이고, 영화제 측에서도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다들 모르는 척 하며 대통령을 맞이했다. 대통령은 영화한 편을 관람한 뒤 영화 관계자들과 식사자리까지 이어갔다.

일국의 대통령이 영화제 기간 동안 현장에 나타나 영화 보고 영화인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이런 저런 말을 듣는 것은 얼핏 여유로워 보이는 듯하지만, 대통령의 방문이 갖는 의미와 현장에서 드러낸 표현들을 들여다보면 공공연히 정치적 후원의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부산영화제가 출발한 것은 1995년이지만 회가 거듭되는 동안 구내를 대표하는 문화 행사로 주목받았다. 대외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영화제 집행부를 비롯한 좌파 세력들은 영화제 장악을 위해 부산시와 갈등을 빚었다. 좌파들의 의도를 파악한 부산시 측은 정상화를 위해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퇴출을 실행했고, 그동안의 운영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사업비를 부당하게 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 인해 이용관과 전양준 프로그래머 등이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았다. 좌파영화 세력들은 이를 부산시의 부당한 압력인 것처럼 호도하며 전방위적인 반발과 압력을 가했다. 김동호 위원장과 강수연 부위원장이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맡아 수습에 나섰지만, 좌파 세력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영화감독조합, 여성영화인회의 등 좌파성향 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영화제 참가 보이콧 운동을 폈고, 좌파 언론들 또한 부산영화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영화제 등장은 ‘문화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홍보와 함께, 부산영화제를 좌파 세력의 진지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대통령은 주변에 모인 영화인들에게 ‘옛날 위상을 되찾도록 해주겠다’고 약

속했다. 그동안 부산영화제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렸다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이 정치적 지원을 약속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문대통령의 이같은 행동의 모순은, 전 정부에서 좌파 여론에 대응하는 문화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적 노력을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하며, 권력이 문화예술계를 정치 기반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했다고 비난한 것을 잊어버린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옛날의 위상을 되찾도록 해주겠다'며 추종 영화인들 앞에서 선언한 것이다. 이후 부산영화제의 운영은 다시 좌파 세력들에게 돌아갔고, 부산시의 관여나 관리 업무는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사실상 영화인들이 영화제의 운영을 장악한 것이다. 이 일은 대통령이 문화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여서 위법 논란을 일으켰다.

현행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결과적으로 모두 좌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반대한민국 세력을 정부가 양성하는 모양새가 된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화계의 경우, 대표적인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CJ E&M조차 좌파들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영화 제작과 배급 부문에서 주용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직 계열화를 이용한 독과점이라고 비난한다. 영화관 CGV는 특정 영화의 상영 스크린 수를 많이 배정하면 그때마다 또다른 독과점 논란이 벌어진다. 상영관을 몇 개로 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영화관 측의 사업적 판단에 따를 일이며, 상영관을 확대하고 흥행 성과를 내는 경우에 그 혜택을 보는 것은 대부분 한국영화들이다.

스크린 독과점 시비를 하는 쪽은 주로 흥행성 있는 규모의 영화제작을 하기 어려운 군소 프로덕션이나 상업적 가치가 현저하게 다른 이른바 독립영화 계열의 단체들이다. 자율 경쟁의 제작과 유통을 인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반 시장적 주장을 영화계의 여론이라고 착각하는(또는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정치인들은 규제 위주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영화가 스크린을 과도하게 차지 하지 못하게 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중심으로 하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문화부도 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크린 상한제의 개념은 시장의 균형과 경쟁력이 약한 영화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지만, 흥행가능성이 높은 영화의 배급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영화를 부양함으로써 시장적 흐름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흥행성이 낮은 영화를 아무리 부양하더라도 관객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결국 흥행성 높은 영화대로, 그렇지 않은 영화는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외국영화와의 경쟁으로부터 한국영화의 시장을 확보해주어 산업적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한 국산영화의무상영제(일반적으로 스크린쿼터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며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사례를 생생하게 경험했는데도, 정부나 좌파 활동가

들, 이에 편승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가세로 같은 오류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개정 발의와 관련 단체들의 연대, 일부 정치인들과 정부 주무부처의 가세, 대통령의 좌파 단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등은 현재의 문화계 실태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새로운 문화정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좌파 정권의 문화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자유 우파 진영에서는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운영 방향의 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플랜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의 오락가락하는 각 분야의 정책적 미비함이나 무면허 음주 같은 국가경영 역량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우파 민주 진영이 국가를 경영하게 되었을 때 지향하는 국정 방향이나 가치는 무엇인지, 지금의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좌충우돌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

상위의 개념으로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헤아릴 수 없는 하위 영역들이 존재한다. 영화의 경우를 예로 든다고 하더라도 콘텐츠를 생산하는 제작 분야가 존재하고, 종합된 결과물인 영화를 배급, 유통하는 영역이 다르다. 제작 분야라 하더라도 상당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이른바 메이저 레벨과 그렇지 않은 마이너 그룹들의 입장이나 인식은 다르다. 영화관을 운영하는 그룹과 스트리밍을 위주로 하는 사업자 영역의 이해관계도 다양하게 얽힐 수 있다.

다른 장르 역시 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전통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연, 음악, 세공, 직공 등으로 수없이 갈라질 수 있다.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 환경도 다양하다. 각 세대에 따른 삶의 방식이나 인식, 가치가 다르고 계층의 차이에 따라 특정한 가치를 수용하거나 소비하는 패턴이 달라 질 수 있다.

일상 생활의 라이프사이클도 순환주기가 빨라진다. 스마트폰의 새 모델을 구입하는 순간 이미 다른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지금의 것을 낡은 것으로 밀어낸다. 영화, 드라마, 가요 등이 어느 단계에서 인기를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다음 작품의 성공을 보장하는 방패 역할을 하기 어려우며, 어떤 이유로 인기 스타가 되었다고 계속 그 인기를 지속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다. 전지현이나 송혜교, 김수현, 송중기, 박보검처럼 어느 순간 압도적 인기를 확보하는 것처럼 보였던 스타들이지만 지금도 그 같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생활 환경, 미디어 환경, 삶의 방식, 소비 트렌드 등의 환경의 급변은 어떤 것을 중심 가치로 삼아야 하는지, 삼는다 하더라도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다.

지금의 시대적 환경은 이전에 누구도, 어느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도, 계속 연결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누구든 적응을 요구당하고 있다.

성과와 효율을 강조하면 산업화 시대의 모순과 갈등을 추종하는 개발 독재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공격하고, 평등과 분배를 앞세우면 현실을 무시한 관념론으로 그치는 한계에 직면해야 한다.

‘문화비전 2030’이 2030년에 이르기까지의 장기적 문화 비전을 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환경이나 논리, 개념이 계속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장도 하기 어렵다.

스스로 자생한 대중문화 - 간섭할수록 왜곡 가능성

이같은 환경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민간영역과 정부의 개입 간 역할 배분과 균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라는 점이다.

대략 1980년대 이전까지의 문화 정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민간의 역량이 극히 빈약하고, 재원이나 인력, 정보 등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는 정책적 권한과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점에서 수레를 끄는 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한 오늘의 여건에서 본다면, 민간의 역량은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앞서거나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수준이다. 한류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대부분의 성과는 민간이 일구어낸 것들이다. 아이돌 발굴은 연예 기획사들이 공들여 만든 작업이고, 그들을 통해 한류 붐을 일으킨 것도 민간의 노력이 만든 결과다. 특정한 분야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스스로의 자생력과 여과 과정을 통해 더욱 진전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지금의 문화 정책 주무 부서가 영화나 가요, 드라마 제작, 출판 등의 영역에 구체적 인 가이드나 진행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 뭔가를 하겠다고 나설수록 불필요한 간섭이나 발목 잡기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문화부의 시도가 오히려 영화계의 자생력을 훼손하는 제도적 방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간 영역의 운영은 최대한 자율에 맡기되 정부의 개입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 단위의 여건을 부양하는 정도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과 공공 간의 균형 유지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에서는 공공 지원을 요구하고,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이런저런 명분으로 개입과 지원을 늘이는 쪽으로 움직여왔다. 지원의 명분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분야의 자생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관행적으로 지원이 반복되고 있을 뿐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공공 지원으로부터 독립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때 세종문화회

관이나 국립 예술단체들에 대해서 경영성과를 평가하겠다고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예술활동을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발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다. 정부의 반문화 정책을 비난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현재 문화부와 관련된 법규는 문화예술분야의 28개를 비롯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18개, 관광 부문 5개, 체육분야 12개 63개, 문화재청 관련 8개 등 모두 71개에 이르고 있다. 각 분야에 대한 업무 범위를 수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하거나 임기대응식으로 제정되어 각 법간의 유기적 상관성이나 연결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면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의 가짓수가 많다 보니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기관, 단체의 숫자도 그만큼 많아져야 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각 기관 단체를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의 증가는 피할 수 없고, 업무의 효율보다는 예산 확보와 집행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을 찾아보기 버려진 사업들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조정이나 통합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운영되고 있는 조직의 변경에는 소속 인력의 반발, 관련 업계의 저항,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 집단들의 이해득실 계산 등이 뒤따르기 마련이어서 누구도 선뜻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민간과 정부(공공) 영역의 역할 간에 균형을 맞춘다 하더라도 중앙과 지역간의 권한 위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피는 일이다. 공공의 정책 운영을 중앙정부 단위에서 관리한다면 권한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적 흐름에 어울리지 않고, 지역에 위임할수록 운영의 균형과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문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한 두마디의 구호나 부분적인 아이디어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새로운 문화 정책이 다수의 공감을 얻으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성별, 세대별, 장르별, 지역별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일은 국가 경영의 기초를 세우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성장은 결국 건강한 문화 풍토와 창의적 여건의 보장, 자율성의 존중, 정책의 후원자 역할 등의 조건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에야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대중문화산업 평가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서성교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초빙교수

대중문화산업 평가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

토론자 : 서 성 교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초빙교수)

□ 토론회 주제와 목적의 적실성

- 토론회 목적 : 대중문화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안 마련
- 대중문화예술이 이념적·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진영을 대변하는 투쟁의 도구로 전락한데 대한 반성과 성찰과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
- 국민 일반 대중이 일상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다양화, 심층화, 다중 채널 확보가 필요
- 대중문화예술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 산업규모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재도약이 필요

□ 발제에 대한 논평

- 부제에서 보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자율과 이념의 간섭’ 즉 1)정부의 문화 예술에 대한 개입 2) 문화예술의 이념성의 문제를 잘 부각
- 발제 내용대로 최근년 한류 붐은 정부의 지원보다는 문화예술인 스스로 만들어낸 성과
- 단지 정권의 향방에 따라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인사 독점, 편향적 예산 지원, 정책 방향의 선회로 인한 문제점 야기를 잘 지적
-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부산국제영화제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도 잘 설명
- 좌파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이 사회적인 이슈(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드배치, 조국 사태)에 대한 관여의 부적절성도 적절히 제기

□ 발제에 대한 보론

○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제작물’) 제작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1. 대중문화예술인의 제공하는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 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 공연물 제외)
 -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 제외)
 -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 영상파일
 - 마.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
2. 제1호 각 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2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약칭:대중문화산업법)

- 법의 목적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법1조)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

토론문1 | 대중문화산업 평가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법17조, 시행령3조)

- 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속이며, 2011년 5월 개소

※ 센터의 지원 업무 : △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사 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 「대중문화예술산업 자문위원회」 구성 : 종사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 (법 17조 3항, 시행령 4조)

- ‘실태조사’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법18조)

※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2018년1월 발간)

(1) 현황과 문제점

- 조사 대상 : 모집단 : 기획업 1952개, 제작업 1541개
응답 : 기획업 1328개(70.6%), 제작업 921개(59.8%)
대중문화예술인 743명, 제작물 스태프 319명

토론문1 | 대중문화산업 평가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

<표 2-3-19> 직군별 소득 현황 (1)

분야	직군	주요 내용
기획	기획/제작	• 경력에 따라 소득이 다르며, 표준계약서 썼을 때 기준으로 제작비 60억 원에 처음 시작하는 막내 160만 원 이상, 팀원(3작품 경력) 230~240만 원, 부장 200만 원 후반~300만 원 초반, 실장 350~400만 원 초반 정도임.
	연출	• 영화 스크립터는 평균 1년에 1작품, 10~8개월 작업 기간 거치며, 10년 정도 경력이면 월 350만 원(세전), 연출부 막내는 월 270~300만 원(세전) 정도임.
	홍보 마케팅	• 회사마다 차이 있지만, 홍보마케팅 팀장급 8년 기준으로 연봉 3,000만 원이 일반적임.
	구성작가	• 일의 분량에 따라 소득 차이가 극명함. 메인작가의 경우 평균 연봉 4,000~5,000만 원, 최대 1억 원 정도이며, 일반 메인작가에 비해 예능작가의 수입이 더 높음.
촬영	촬영	• 제작비 10~20억 영화에서 2,000~2,500만 원, 제작비 100억 이상은 1~2억 사이로 평균 5,000~6,000만 원 정도 수준임.
	조명	• 업계 평균적으로 막내는 월 200만 원 정도(최저시급), 퍼스트는 월 400~500만 원, 감독은 월 1,000만 원 정도 수준임.
	특수효과	• 회사의 규모나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업계 평균 급여는 사원의 경우 150~180만원, 팀장급은 200~250만원, 실장급은 300~350만 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음.
	그립	• 표준계약서 작성, 3개월 촬영 기준으로 막내 100~150만원, 팀원 200만원, 팀장 : 600~700만원 수준임.

<표 2-3-19> 직군별 소득 현황 (2)

분야	직군	주요 내용
미술	미술	• 주 수입원은 드라마이며, 보편적으로 팀장급 월 400~500만 원, 팀원 월 200~300만 원, 막내 월 100~200만 원임.
	의상	• 보통 팀장급은 224만 원(세전), 팀원은 210만 원(세전), 막내는 198만 원(세전), 실장급은 개인차가 커 평균내기 어려움.
	분장	• 보편적으로 팀장급은 월 300만 원, 팀원급은 월 200만 원, 막내는 월 150~170만 원 정도임.
	소품	• 팀(소품회사)마다 다르지만, 팀장(5년 이상 경력)급 월 300~350만 원, 막내 월 150만 원 정도임.
음향	동시녹음	• 4개월 소요되는 작품 하나 당 팀장급 소득은 월 4,000만 원, 붐오퍼레이터는 월 500~600만 원, 붐어시스턴트(막내)는 월 250만 원 정도임.
	음향	• 신입은 1,800만 원 정도, 팀장급은 2,500만 원 이상 수령함. 보통 회사원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있지만, 영화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초과수당은 없음. 프리랜서일 경우, 한 곡당 평균 30~50만 원 정도 받음.
	음악	• 팀장급일 경우라도 작품 활동이 적어질 경우 그 외 소득이 60% 이상 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팀장급은 대중문화활동 소득이 전부임. 팀원들의 경우 레슨이나 대학 강의를 병행하는 경우 많음.
편집	편집	• 신입 편집기사는 월 100~150만 원, 경력 좀 쌓이면 160~180만 원 정도로 업계 통상적으로 소득 낮은 편임. 후반작업 중 편집은 편집료 편차가 큰 만큼 임금 편차도 큰 편임.
	Visual Effects	• CG업체 소속은 초급 월 150만 원 내외, 실장급 월 400만 원 정도임. 월 평균 300~400만 원 버는 프리랜서가 업체 소속 직원 보다는 소득이 높은 편임.
	DI	•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들은 회사가 원하는 단가표에 못 미치게 되면 인맥을 통해 부탁하는 경우 있음.
가타	보조연기자	• 기본급 기준, 낮 촬영(아침7~8시부터)부터 오후 6시까지 촬영하며, 오후 6시 이후 촬영 종료 시간에 따라서 오버차지가 추가되어 출연료가 추가됨. 업계 통상적으로 오후 6시 이전에 끝나면 기본급 55,000원(소개비 빠면 실 수령액 45,000원)이며, 오후 6시 이후부터는 기본급에 50% 27,500원) 추가되며 새벽 12시가 넘어가면 11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음.

토론문1 | 대중문화산업 평가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

(2)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적 지원 사항

<표 2-3-21> 직군별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1)

분야	직군	주요 내용
기획	기획/제작	• 스태프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정책적 보장, 지역으로 보험으로 전환되는 공백 기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연출	• 공백 기간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홍보 마케팅	• 임금체불, 부당대우, 근무시간에 대해 대처해 줄 수 있는 기관 신설, 고용 안정에 대한 구조적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구성작가	• 현 실적에 맞는 제작비 지급, 제작사 없이 작가들이 공모전에 기획안을 낼 수 있는 환경 조성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촬영	촬영	• 실험영화 등 다양한 영화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조명	• 임금과 근로 시간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제도 마련, 형식적인 표준근로계약 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특수효과	• 표준근로계약의 안정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그립	• 제작비 큰 영화들의 스크린 독점 상영 방지에 관한 제도적인 규제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표 2-3-21> 직군별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적 지원 (2)

분야	직군	주요 내용
미술	미술	•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등을 감시 및 관리감독 하는 인력 파견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의상	• 표준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참여한 저예산영화 작품도 모두 다 경력으로 인정받는 제도 확충, 다음 작품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분장	• 모든 영화가 표준계약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규제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소품	• 영화 자체가 전부 표준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음향	동시녹음	•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개선, 최저생계비 보장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음향	• 노동시간 대비 월급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임금이 보장되는 제도와 지원 시스템, 작업 환경이 보다 열악한 사운드/CG/편집 쪽의 후반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음악	• 4대 보험가입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편집	편집	• 표준계약서 관련, 작품 활동 사이의 공백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최소 생계비용 지원제도 확충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Visual Effects	•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적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DI	• 노동자 사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스템 확충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기타	보조연기자	• 업체로부터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3) 실태조사 보고서가 제안하는 대안

- 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과 스태프들의 활동 시간, 임금, 수당 등을 명확히 기재

• 실태조사 결과 계약서 작성 현황

응답 대상	구분	조사 실시 연도	
		2015년도	2017년도
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표준계약서 작성	72.8%	84.0%
	소속연습생 대상 계약서 작성	66.8%	69.1%
	소속직원 대상 표준계약서 작성	53.0%	72.2%
제작업	소속직원 대상 표준계약서 작성	59.5%	77.7%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표준계약서 작성	72.4%	75.9%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서면 계약	45.3%	66.5%(2016년 기준) 67.1%(2017년 기준)

- ② ‘정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창작 지원금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수혜자 편중 현상 △지원대상 선정 방식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입 예술인에 대한 최저 생계비 보장 △예술인 패스에 대한 홍보 등 필요
- ③ 대중문화예술인 ‘정보은행’ 설립 :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개인 프로필과 작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은행 설립 필요

○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10회 수상식(10월30일)

- 목적 :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가수, 배우, 성우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을 격려, 정부 포상 제도
- 문화훈장 5명(김혜자, 양희은 은관문화훈장), 대통령표창 6명(염정아, 배철수 등), 국무총리표창 8명, 문체부 장관 표창 9명(팀) 등 총 28명(팀)에 훈장 및 표창 수여
- 평가 : 순수 예술에 비해 차별을 없애고, 국민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고, 대중예술의 발전을 위해 기여

□ 대중문화예술산업 이슈과 대안

○ ‘한국형 대중문화예술’의 정체성과 본질 탐구

- 세계화와 지역화 동시 추진 → Glocalization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 현대는 피상적인 것이 아닌 ‘인간’ 근본을 위한 노력, ‘인간’ 본질적인 희노애락을 공감(예, 대장금, BTS 등)
- 수평(세계)과 수직(역사)을 꿰뚫는 무궁무진한 한국의 문화예술적인 소재, 역사와 인물에 대한 발굴과 재해석
- 사회 전체가 공감, 공유할 수 있는 대중 문화예술 작품을 개발해야 순수냐 참여냐, 진보냐 보수의 틀을 넘어설 수 있음

○ 문화예술의 가치와 비전 재설립

-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비전 2030」은 기본적인 개념만 설정한 말의 성찬일 뿐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의 부재
- 문화 3대 가치로 △개인의 자율성 △공동체의 다양성 △사회의 창의성을 제시하고,
 - 자율성은 국가는 ① 개인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고, ②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③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도록 노력,
 - 다양성은 ④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확산하고,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며, ⑥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
 - 창의성은 ⑦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을 확대하며,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추구

토론문1 | 대중문화산업 평가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

- ☞ 문화예술은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의 발현 + 산업화의 능력 +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결합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
- 문화예술인간 소통 공간, 즉 하버마스의 소통공간 (public sphere) 창출을 위한 노력
 - 두 개의 문화예술단체의 대립(예총과 민예총)을 해소하고 소통과 수렴의 기제 발현을 통한 통합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예총, 1962년 설립)은 한국 민족예술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문화인들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하여 설립된 순수 예술문화단체
 -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 1988년 창립)은 민족예술 창조에 뜻을 함께 하는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의 모임
-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진영 참여와 발언 자제
 - 대선 때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 자제
- ☞ 대중문화예술 공약과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로 방향 전환
 - 발제의 내용대로 문화예술인들이 정치적 이슈에 참여하여 평가르기,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최근의 조국 사태를 두고 대중문화예술인들간 찬반 갈등에 뛰어들면서 혼란을 더욱 부추김
 - 문화예술을 이념 투쟁의 도구화, 문화예술인의 전위화는 문화예술을 오히려 망치는 일
- 문화예술기관장 정치적 낙하산 인사 금지
 - 기관의 직책과 예산을 독점하고,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정권의 기반을

토론문1 | 대중문화산업 평가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강화하기 위한 정권 진영 인사 철저히 배제하고, 문화예술인 스스로 인사를 결정하도록 위임

※ 「문재인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3차 자료」(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전체 임원 3,368명 중 515명이 낙하산 인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34개 기관에도 43명의 임원이 캠프 출신 혹은 문재인 지지 선언했던 인사들임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경제성 문제

- 예술은 창의성이지만 산업화는 투입(공급자) 대비 산출(소비자) 구조가 이루어지는 경제성을 지녀야 함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의 네트워크 지원 :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 코트라 등 종합 지원 체계

- 정부의 외교 정책 결정시 ‘문화예술산업’ 분야도 주요 변수로 검토

※ 중국과 사드 배치 갈등과 보복,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문화예술의 충격이 심각

○ 정부 규정의 글로벌 현실화

- 문화예술은 표현의 자유를 부여해야 하는데, 정부 심의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국제적인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곤란

- 대중문화예술인, 특히 남자의 경우 병역 문제가 큰 장벽이어서 육성 지원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애로 사항도 있음

문화 강국인 동시에 문화 후진국인 대한민국

남정욱 대한민국 문화 예술인 공동대표

토론문

문화 강국인 동시에 문화 후진국인 대한민국

남정욱(대한민국 문화 예술인 공동대표)

1.

문화의 기본은 흥내 내기다. 절대왕정 시기 왕이 하면 귀족들이 따라하고 귀족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평민들이 흥내 낸다. 여기에는 음악, 미술, 패션, 요리 등 삶의 전반이 다 포함 되는데 변두리의 가난한 집도 식탁보를 깔고 촛대를 놓은 뒤 계란 프라이 하나를 먹더라도 격식을 갖추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이런 전통 내지 경향 때문이다. 스위스의 산골 식당에서 의자에 입고 갔던 파카를 걸쳐놓았다가 망신을 당한 한국 여행객의 회고담은 이 연장 선상에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따라 할 상류문화가 존재하는가. 없다. 이는 단지 한국전쟁을 통해 전 국민이 총체적으로 평등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애초부터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상류층의 문화라고 할 만 한 것이 없었다. 먹고 마시는 문화의 핵심은 술 문화다. 이 경우 전통주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 상류층이 즐기는 술이 있으면 이에 따른 그릇 문화가 발달하고 자리에 어울리는 의복이나 술을 마시는 예법이 뒤를 따른다. 우리에게 고급 전통주가 있는가. 없다. 전통주라고 부르는 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짧아 명주名酒가 되기에 애초부터 적당하지 않다. 한동안 격렬하게 불었던 와인 열풍은 우리의 술 문화 부재와 문화 따라 하기를 증명하는 현상일 뿐이다. 조선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라고는 입신양명을 위한 학문뿐이었다. 학문도 유행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문화라고 부르기에 적당하지 않다.

유럽의 식탁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화제에 오르지 않는다. 인류 역사와 거의 비슷하게 전개된 계급 간의 치열한 정치 투쟁, 종교에서의 신구新舊 갈등으로 피가 마를 날이 없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정치와 종교는 금기어가 되었다. 정치와 종교를 빼면 뭐가 남을까. 결국 문화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해서 유럽인들은 가족이나 이웃과의 친교 자리에서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음악을 들었고 어떤 연극을 보았는지를 이야기 한다(물론 인터넷의 보편적인 전파로 이런 현상은 많이 누그러들었다). 구조적으로 우리의 전통은 문화가 받을 디딤이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이 문화 강국 소리를 듣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뚜렷하게 문화 강세를 보이는 두 개의 큰 종목이 영화와 음악이다. 이 두 장르가 세계적인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원에는 두 명의 역척스런 개인이 있다. 영화에서는 강제규 감독이다. 한국 영화를 할리우드 영화처럼 만들고 싶다는 그의 욕망은 '쉬리'라는 기념비적 작품을 탄생시킨다. 평균 제작비 5억 원 안팎이었던 한국 영화 제작비를 30억 원으로 끌어올렸고 영화를 '산업'의 영역으로 진입시켰다. '쉬리' 이후 한국 영화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음악에서는 이수만이다. 외국인이 열광하는 한국 가수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의 욕심은 '클론'과 'HOT'를 통해 시작되었고 아쉬운 대로 '보아'라는 상품을 만들어냈다. 당대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해외 시장을 위한 팝스타의 양성이라는 그의 목표는 이후 한국 음악계의 하나의 '지향'이 된다. 그 결과물이 바로 BTS라는 보이 그룹인 것이다(물론 얼마 전 SM에서도 빌보드 탑을 차지하는 보이 그룹을 탄생시켰다).

토론문2 | 문화 강국인 동시에 문화 후진국인 대한민국

K-POP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불행히도 한국에는 그들을 빨아들일만한 문화가 없었다. 외국인들이 그나마 흥미를 느끼는 것이 삼겹살이다. 같이 고기를 굽고 순서에 따라 쌈을 싸고 연장자가 주는 술을 고개를 돌리고 마시는 것에 주목했다는 것은 이른바 '의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례는 고급문화의 기본이다. 그래서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은 고급문화가 아니다. 질 낮은 하층문화는 사람들을 식상하게 만든다. 어떤 나라가 문화 강국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 '말'이 좋아지고 그 나라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그 나라 역사에 호감을 가지게 되는 순차적인 단계를 의미한다. 한국은 말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한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이미지 맵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는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밑으로 내려와 아고라에서 수블라키와 그리스 살라드를 먹고 그리스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그런 방식으로 한 나라와 한 도시를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패턴이다. 우리는 없다. 3박 4일의 한국 여행 코스를 짜임새 있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개인적으로는 서울 - 안동 - 경주로 이어지는 코스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별성과 보편성을 다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동대문, 남대문 쇼펩, 홍대와 강남으로 끝나는 저급한 코스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2.

좌파 문화의 반대말은 우파 문화가 아니다. 좌파 문화의 반대말은 고급문화다.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줄리아 로버츠는 오페라 '춘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탈리아를 전혀 모르고 다만 줄거리만 알고 보는데도 그렇다. 좌파 문화는 기본적으로 거리의 문화이고 B급 문화다. 줄리아 로버츠는 아마 다시 거리의 난폭한 문화에 정신을 홀리지 않을 것이다. 한번 고급문화에 맞을 들이면 그 아래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고급문화는 어떻게 확산되는가. 잦은 노출이다. 접하기 쉽고 용이해야 한다. 토론자가 사는 동네에는 커다란 공원이 있고 거기서 한참 떨어져 역시 커다란 예술센터가 있다. 그렇게 배치하면 안 된다. 공원 옆에 예술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어야 사람들을 문화에 익숙하게 만든다. 오르세와 오랑주 미술관은 센 강에 붙어있다.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로댕 박물관이 나온다. 우리 돈 1만 원 내외면(아예 영국처럼 미술관, 박물관이 대부분 무료면 더 좋고) 질리도록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서울 시내 혹은 신도시 중심에 미술관이 있고 거기서 루브르에 있는 '그랜드 오달리스크'를 보는 일은 대체 왜 불가능한 것일까.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하는 방향은 각각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 쪽이다. 사람들의 안목이 높아지면 국내용 혹은 내수용 예술가들도 분발하게 된다. 이념이 들어설 자리는 갈수록 줄어든다. 이념은 촌스럽기 때문이다.

3.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는 원칙은 중요하다. 한국 여자 골프가 강한 이유는 골프청이나 골프국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청이 생기면 어린 여자 골퍼들이 독하게 운동할 여지가 사라진다. 인권 따위를 내세우면서(이건 일반인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특별한 능력을 갖춘 영재들을 나락으로 처박을 것이다. 혁신 학교를 내세워서 외고, 자사고, 특목고를 죽이는 것 그래서 결국 아이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는 하나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원의 방향과 간섭하지 않는 것은 별개다.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원이고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두는 것이 불간섭이다. 이게 정신이 올바른 박힌 정부가 할 일이다.

문화 정책에 대한 몇가지 제언

이인철 변호사

토론문(문재인정부문화정책평가토론회)

문화 정책에 대한 몇가지 제언

이인철 변호사 (前 영화진흥위원회 감사, 前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1. 문화 정책의 원칙과 현안

- (1) 문화 정책: 문화의 현실사회에 대한 영향력, 조성행정으로서 진흥정책
- (2) 원칙 : 문화예술분야의 자율성
불간섭원칙: 지원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 과제 : 재정 사용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 (3) 현안 : 증가하는 문화 정책 환경에서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필요성 검토

2. 문화 정책의 확대와 그 원인

- (1) 문화 정책의 확대
제6공화국이후 문화국가 개념
1990년 문화부신설, 문화주의 시대, 2000년대 문화향유, 문화산업, 관광산업 시대
2천년대 말부터 문화융성, 한류의 확산. 문화국가비전, 문화복지로의 확대
- (2) 문화 주체 개념의 변화 : 전통적인 창작자와 관객 관계에서 혼합적 지위
창작자. 문화소비자 -> 문화향유. 문화권(문화기본법 4조, 자유권에서 평등권으로)
권리에 기반한 문화복지에의 요구 (문화기본법 7조 4호)
- (3) 문화산업의 발전과 문화산업에 대한 공적 성격의 부여
문화자본의 확대.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발전, 문화복지로 공적인 성격 부여
- (4) 문화 거버넌스
문화의 사회통합적 기능으로 문화국가론, 국가(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문화민주주의: 시민사회개념의 변화, 문화의 참여와 접근- 다원성, 지역성, 분권화
문화복지: 문화향유정책, 문화도시, 문화기반시설
플랫폼으로서의 문화 : 문화콘텐츠가 미디어를 주도, 문화도시라는 플랫폼

3.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2030의 비판적 평가

문재인정부 문화비전2030정책에서 문화정책의 원칙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은 문화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2014.3.31.시행 문화기본법)

문화비전2030은 기존의 문화정책의 내용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넣어서 “사람이 있는 문화”라고 포장했지만 확장되는 문화 정책 기조의 연장,

자유권과 평등의 요청의 성격이 같이 있는 문화권에서 평등권적 성격을 강조. 2017.11.28.개정 문화기본법 4조에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을 삽입 개정. 문화 부문에서 정치적 요구의 활성화

“사람”과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문화정책의 정파적 운용의 우려를 보여주고, “국가가 삶을 책임진다”는 구호와 함께 문화분야에 있어서 정부주도적인 문화복지 정책으로 귀결 우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는 사회를 의미하고, 사회복지 확대의 문화적 접근.

4. 문화진흥사업의 내용에 대한 검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규정등)

(1) 무엇이 과제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위해서 지원하는가

수용자인가, 창작자인가 / 창작물인가, 창작자인가

콘텐츠에 대한 지원인가, 제작기반에 대한 지원인가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작품성인가, 투자성공가능성인가

(2) 문화향유와 문화 리터러시

문화적 통합을 위한 문화리터러시 증진의 필요성, 국가 재정의 투입으로 국가가 선도하는 것은 결국 내용에 간여하게 되고 민간 자율성 침해

(3) 무엇을 지원하는가 ; 지원의 중복, 분야의 중첩

모호한 개념들: 예. 예술영화, 독립영화, 가족영화, 다양성영화... 상업영화의 차이

콘텐츠란 무엇인가: 문화예술위, 콘진원, 영진위, 기타 진흥의 차이

사업 내용의 중복, 편중 / 중첩적 지원의 문제

(4) 지원 심사의 공정성, 심사결정의 구조

심사위원회 의원 선정 풀의 구성,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기준

(5) 지원에 대한 사후적 평가, 성과 측정

(6)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나, 정책 목표 달성의 결정, 사업의 계속 여부 결정,

일몰제의 예, 국제행사 유지 개최등에 관한 규정(기재부훈령)

5. 문화진흥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검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1) 조직: 위원회 시스템

위원회의 구성, 비상임 이사의 역할과 한계

(2) 목표와 정책방향성

정책 목표의 설정, 정책 목표 달성의 결정, 기관평가의 과제

(3) 운용과 관리

예산의 배분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사후관리

(4) 재정운용의 문제, 기금 관리, 재정 낭비여부

6. 앞으로의 정책 방향

(1) 콘텐츠와 미디어 / 수용자와 창작자

한 콘텐츠가 여럿 매체로 사용되는 환경에서 문화 분야의 구분의 의미
수용자와 창작자가 혼재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대상의 의미

(2) 문화진흥사업의 보조금 지원의 내용적 검토

문화복지로 무한정한 지원의 지속가능성과 필요성 여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정파적 운영의 문제의 해소
국가 사업과 지자체 사업

(3) 문화진흥사업의 공공기관, 공공기금에 대한 검토

문화분야의 공공기관과 공공기금의 재검토

(4) 문화행정정책 부서에 대한 검토

미디어와 콘텐츠가 통합되는 상황에서 행정조직 통합 검토 여부

7. 결론

대중문화사회에서의 문화의 영향력을 고려한 문화정책의 검토

대중문화산업 평가와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 토론문

남찬우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대중문화산업 평가와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 토론문

이기현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산업 평가와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 토론문

한국콘텐츠진흥원 이기현

■ 발제문에 대한 의견

- 발제자의 대중문화 발전에 대한 애정과 관심 및 우려를 잘 읽을 수 있는 발제문임.
 - 특히 문화계 블랙&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통해 현재 국내 대중문화의 현주소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문화계가 정치적 진영논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많은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cf.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결과보고에 따르면, 콘진원은 수사의뢰나 징계권고는 없으며, 감사 권고 2건임, 현재 심사평가제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진행 중

■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징

- 제작부분은 노동 및 기술집약성이 강하고 소요비용이 크지 않은 반면,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제작된 콘텐츠의 상품성과 매출액 등 상업적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님(high risk high return)
- 유통사업자의 시장 우월적 지위: 거래관계의 지속성(durability), 수직성(verticality), 전속성(exclusive)으로부터 기인하는 수요독점적 거래구조 고착화
- 시장구조의 개선은 콘텐츠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며. 특히 국내 산업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cf. Google과 Netflix 사례

: ‘디지털세’ 도입, OTT와 영화관의 공생, 스크린 상한제 도입 등

cf. 유럽연합(EU) 저작권 지침(2019, 04): 콘텐츠 권리자(저작자/실연자)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복제권, 공중전달권) 인정

■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평가

- 정책 방향
 - 과거 정부: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킬러콘텐츠 개발, 한류 확산, 문화융성 등
 - 현 정부: 문화비전 2030 개인의 자율성, 공동체의 다양성, 사회의 창의성
 - : 콘텐츠산업 정책: 정의, 향유, 공정경쟁, 콘텐츠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혁신 성장
- cf.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 보고(2018.12)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2019.08)

-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내용면에서 현격한 차이는 없음.
다만, 정책기조에 따라 Tone&Manner의 차이가 드러남
cf. 노무현 정부: 창의한국(자율, 참여, 분권). 문화예술위원회, 문화강국(C-Krea) 2010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12, 문화바우처 제도, 공공기관 통폐합,
박근혜 정부: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법, 문화가 있는 날 등
-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매출/수출/고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
: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넘어서서 사회문화적 가치에 주목 필요
- o 예산 : 2019년 문화콘텐츠관련 예산 8천억, 문체부 콘텐츠국 5천억 규모
cf. 문화재정 2% 달성 목표? (2019년 문체부 예산 5조, 1% 수준)
- o 법제 : 문화관련 법제 40여개(관광, 체육, 외청 포함 70여개)
cf. 콘텐츠산업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통합,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관련 개념용어의 정비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의 경계 허물기
- o 문화다양성은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통해 담보
cf. 시장실패의 보완, 시장진입 장벽 완화, 진흥정책의 투명성/공정성
- o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 시민영역과의 협치, 관료주의 탈피, 문화정책의 연속성 확보가 향후 과제
- o 정치의 과잉은 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
: 공존의 지혜, 팔길이의 원칙 -> 정책은 정치의 여과장치가 되어야...

| 좌장 | 정갑영 전 문화관광연구원장

| 발제 | 조희문 영화아카이브 대표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사회 | 조희수 전 SBS 앵커

| 토론 |

- 서성교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 이민철 변호사

-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

- 남찬우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 이기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전문위원